

# 정보통신 시장개방과 활성화



金 榮 燦  
(중앙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 필자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동대학원 공학박사
- ▲佛 ENSIMAG 연구교수
- ▲중앙대 공대 전자계산학과 교수(현)
- ▲한국 정보과학회 부회장(현)

## 서 언

근래에 와서 선진국마다 정보통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국내에서 쇠퇴해가는 일차산업과 이차산업의 대응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다음 세대의 중추적 산업분야라 지목되는 분야가 바로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와 같이 각박한 국제경쟁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의 교환이 요구된다. 즉, 정보통신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게는 개별단위 기업들마다 전산화 및 자동화 기기들을 매체로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크게는 대기업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분야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단위 통합정보화 방안을 강구키 위함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기간망거리도 연결 가능토록 하여 목적별로 최대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각국마다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때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 분야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을 향한 선진국들의 우위권 다툼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면서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노골화 하고 있으며 그중 일례가 바로 금년 2월 17일경에 워싱턴에서 있는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이다. 미국측은 우리나라를 통신시장 불공정 무역국으로 내정하는 등의 강한 압력을 시종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사정을 본다면 우리의 정보통신사업은 공중통신사업자로서 한국전기 통신공사나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 망을 위주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이제 겨우 대기업을 위주로하여 정보통신망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장 개방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거쳐가면서 통신관련법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하고 난 1985년경부터야 서서히 개방한 것으로 안다.

이렇듯 시장개방을 장기간에 걸쳐 숙고한 선례들을 보더라도 개방에 앞서 조치해야될 과제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점차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정보통신시장 개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 및 개방에 따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개방의 필요성

먼저 시장개방의 필요성은 이미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히 기술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최선의 정보와 최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환경이 절실히 절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국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산 전산망의 추진과 VAN의 활성화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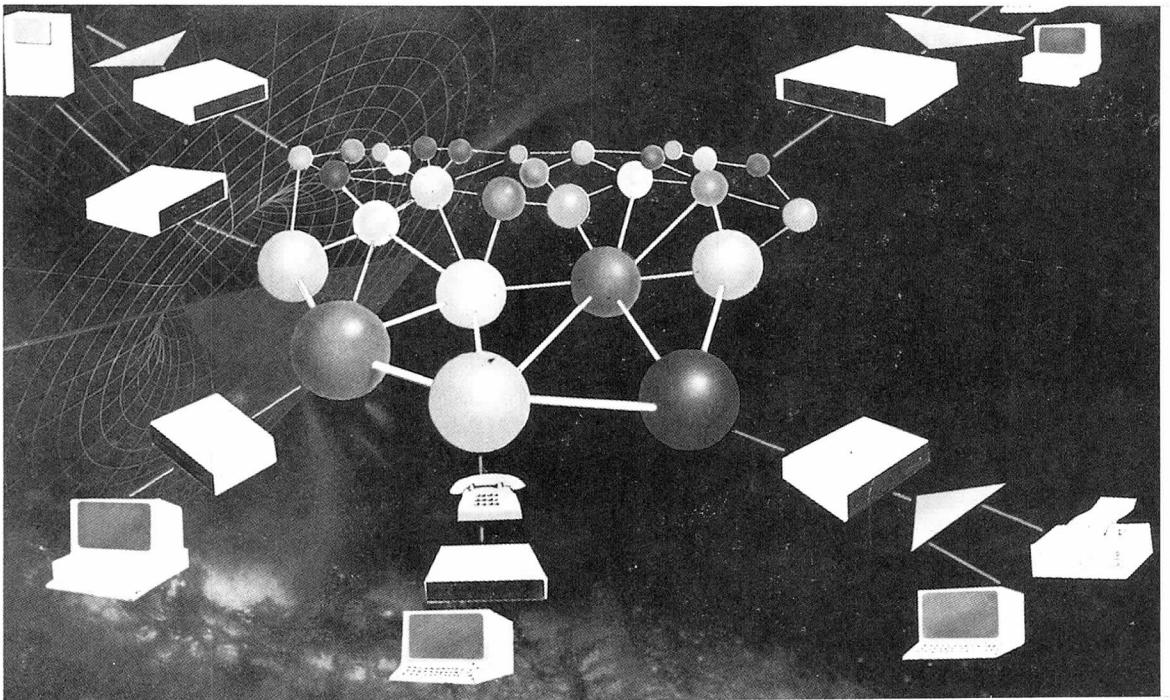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대한 통신기술은 고도의 첨단기술일뿐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자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적인 입장보다는 선진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현하여 기존의 정보매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선진국들과의 공동 정보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개방에 따른 준비시간을 많이 갖고져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의 욕심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선진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필요성은 시간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 정책 방향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 방향도 계속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기술과 그 요구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통신시장 개방요구에서 신축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개방에 앞서 여러가지 표준화라던가 합리화 방안이 선결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별도의 독자적인 분야가 아니라 타산업과 연계되는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서 강한 규제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경영의 합리화와 전문화라는 견해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사업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통신분야가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환경에 의존하여 국가 주도적인 차원에서 매우 강력히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분야의 특성이자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첨단 기술적이며 발전하는 사회환경에 대응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타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안 및 정책상의 제반문제를 고려해 볼때 통신분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다시말해 국가주도적인 통제강화가 요구되는 공평성 및 보안성을 기본으로 한 기본통신분야와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영화에 기반을 둔 통신서비스분야로 구분하여 국제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통신정책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밀려오는 정보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통신기술 도입을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부 선진국들과의 통신협상에서 우의를 정하고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유도하면 시장개방에 따른 우려를 극소화시키리라 고 생각되어진다.

## 활성화 방안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EC)를 우선적으로 통신 불공정 국가로 선정함에 따라, 연초부터 한·미 상호간의 침해화된 분위기속에서 앞으로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면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내적으로도 제반 우리 문화권에 통신의 활성화와 개방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시장의 적

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 걸쳐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형태를 탈피하고 모든 기업이 자유경쟁체제에서 선의의 경쟁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률들을 심사숙고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국가 주도형의 통신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이상의 통신법규들이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신 정책도 결국은 자유화라는 기본원리에 역행할 수 없으므로 시장개방에 앞서 더욱 과감한 통신관계법들의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정보통신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자재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구들이며 그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자재에 대한 표준화와 소프트웨어들의 표준화가 시장개방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한다. 그 예로, 지금도 컴퓨터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시행착오중의 하나가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컴퓨터를 개방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들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는 컴퓨터분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사전에 최대한 줄이면서 조속히 표준화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곧 정보통신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 시급하다. 원래 정보통신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선진대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에 버금가는 기술인력의 양성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화하는 기업들은 많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보통신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즉, 고도의 정보화 사회구현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고 최종적인 사용자는 일반 국민이다. 따라서, 편익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컴퓨터와 통신교육의 저변확대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생활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국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광범위한 정보통신분야 중에서 특히 생활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 S/W 분야는 우리 문화권에 맞는 고유의 특성을 많이 개발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압력을 극소화시켜야 하겠다. 또한, 외국기술과 국내기술을 정복시킨 합작품이 우리 국민생활에 깊숙히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